

자본주의 위기와
노동자 운동
어떻게 싸울 것인가

사회진보연대



머리말

어떻게 싸울 것인가	4
------------	---

I. 노동자 운동, 어떻게 싸울 것인가

노동자의 고용상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7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11
여성노동자들은 어떤 상태로 내몰리고 있나?	13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나?	16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18
쌍용자동차, GM대우 등 외국인 소유 기업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1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가 분담해야 하는가?	23
경제위기 시기에 양보교섭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25
노동운동이 위기인 상황에서 어떻게 노동조합의 힘을 키울 수 있을까?	28
노동자 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나?	34



II. 자본주의의 위기, 어떻게 될 것인가

-
- 38 세계 경제위기는 어떻게 진행될까?
- 41 G20은 세계경제의 회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
- 44 한국경제는 경상수지 흑자로 선전하고 있나?
- 47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어떠한가?
-
- 51 금산분리완화 같은 금융정책의 문제는 무엇인가?
- 55 각종 경기부양책으로 경제위기가 극복될 수 있을까?
- 58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문제는 무엇인가?
- 61 부실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한가?

어떻게 봐줄 것인가

미국 경제위기는 신용경색을 넘어 은행위기가 전개되면서 민간기업의 파산위험이 대형 상업은행과 보험사, 거대 제조업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위기는 산업생산과 수출입 감소, 자산가격 하락, 실업률 증가 등 모든 측면에서 1930년대 대공황 시대와 유사한 경로를 걷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자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현재 실업자는 95만 2천 명으로 4.0%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아예 구직을 단념하면서 경제활동인구 추산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감실업률은 공식실업률보다 두 세 배 이상 높을 것입니다. 서비스업에서 유일하게 일자리가 늘고 있는 분야가 있으나 고용의 질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입니다. 노동자의 임금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임금상승률은 평균 6.4% 하락하였습니다. 상용노동자의 실질임금은 5.9%가 하락했고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무려 12.9%나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이명박정부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노동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규모의 공적자금은 일차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은 한국경제의 금융화를 주도하고 막대한 이윤을 해외로 빼돌려 현재와 같은 위기를 만들어온 장본인입니다. 예를 들어 IMF 경제위기 이후 외국자본에 장악된 국내은행은 배당금으로 엄청난 자금을 해외로 유출했습니다. 2008년 5월 유가증권 외국인 배당총액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국민은행, 외환은행, 신한지주회사가 포함되었으며, 특히 2위를 기록한 국민은행은 한 해에만 6,700억 원을 외국인에게 배당했습니다. 한국에서 경제위기가 심화되자 이들도 눈치가 보였는지 배당액을 축소했지만 그동안 은행과 대기업은 순이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몫을 늘리며 엄청난 부를 향유했습니다. 자본가들은 형편이 좋을 때는 배당, 이자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부실이 폭발하자 그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세금을 통해서 구제금융 비용을 떠맡으면서 해고와 임금삭감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이명박 정부 경제위기 대책의 계급적 본질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중의 위협에 처해 있는 노동자에게 점점 더 많은 양보와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와 자본에 대항해 노동자가 어떻게 싸울 것인지 길을 찾고자 소책자를 기획하였습니다. 우리가 투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품는 데 조그마한 기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진보연대



I. 노동자 운동, 어떻게 싸울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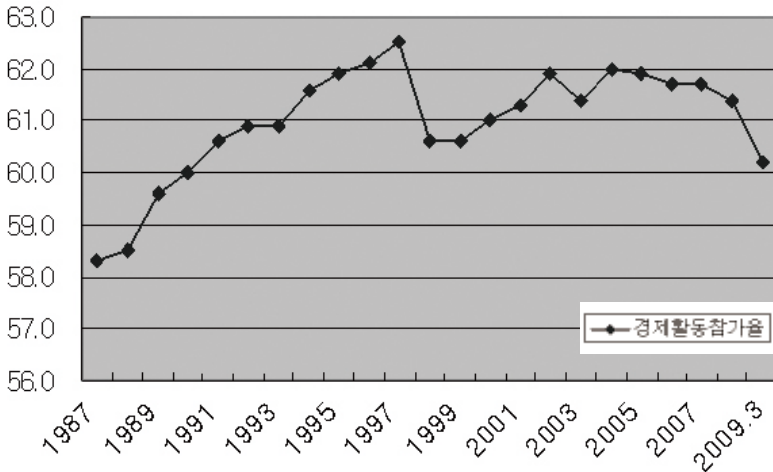
노동자의 고용상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2008년 4/4분기부터 심각해진 경제위기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은 악화하고 있고 임금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용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의 최근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우선 실업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3월 현재 실업자는 95만 2천 명으로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72만 2천 명, 3.0%에 비하면 숫자로는 23만 명이 늘어났고 실업률로는 1.0%포인트가 늘어난 것입니다. 남자 실업률은 4.5%, 여자 실업률은 3.1%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업률마저도 현재의 열악한 고용상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활동 중에 있는 사람의 비율)이 대폭 떨어지면서 실업자(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하고 있지 않은 사람)로 분류될 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가정주부,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이 포함됨)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7-98년 IMF 경제위기 이전에 계속 상승해오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위기를 계기로 대폭 떨어진 뒤 위기 이전 추세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또 다시 한 단계 하락하여 IMF 위기 당시의 수준보다 더 낮아져 2009년 3월엔 60.2%를 기록하였습니다. IMF 위기 직전인 1997년 62.5%에 비해서는 2.3%포인트가 하락하였고, IMF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2004년 62%에 비해서는 1.8%포인트가 하락하였고, 61.7%을 기록한 2007년에 비해서도 1.5%포인트가 하락하였습니다(그림 참조).

[그림] 경제활동참가율



당연히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었습니다. 2009년 3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587만 5천 명으로 2008년 3월의 1,535만 명에 비해 52만 5천 명이 늘었는데 이는 15세 인구 전체 인구 증가 규모인 47만 3천 명을 넘어선 규모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은 무려 152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만 3천 명이 증가하여 16.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20대와 40대에서 “쉬었음” 범주의 증가율이 각각 20.3%, 27.8%로 매우 높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20대 실업률이 8.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마저도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40대 실업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직단념자는 17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 1천 명이 늘었습니다.

결국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수 증가로 인해 취업자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취업자수는 2,311만 명으로 2008년 6월 2,396만 3천 명에 비해 무려 85만 3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율이 57.9%로 2008년 10월 60%에서 무려 2.1%포인트나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취업자수 감소가 현저하고, 성별로 보면 남성은 전년동월에 비해 4만 6천 명이 감소한 데 비해 여성은 무려 14만 9천 명이 감소하고 있어 경제위기가 도래하면서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일자리 감소는 제조업에서 12만 2천 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9만 8천 명 발생했습니다. 한편 취업자수가 늘어난 산업도 있는데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25만 8천 명이 늘었고, 이 중 여성취업자 증가가 16만 9천 명, 남성취업자 증가가 8만 9천 명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저임금 또는 낮은 소득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추측됩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앞에서 언급된 여성의 낮은 실업률은 여성의 열악한 고용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가사, 육아 범주의 증가에 의해 여성의 높은 실업상태가 은폐되고 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의 취업증가 또한 여성의 열악한 고용상황을 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현재의 고용상황, 특히 여성의 고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6.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6시간 감소하였습니다. (취업시간은 노동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취업시간을 다 포함한 것이고, 노동자의 취업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참고로 상용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전체노동자의 근로시간은 2008년 4/4분기에 39.8시간입니다.) 제조업(46.9시간)은 2.3시간, 도소매 음식숙박업(50.4시간)은 1.6시간, 건

설업(44.5시간)은 1.3시간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95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8% 증가하였고, 이 중 18시간 미만 취업자는 90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9%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54시간 이상 취업자수는 656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3만 2천 명이 줄었고, 비율로 보면 14.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취업시간 감소로 주당 총 취업시간은 10억 6,306만 시간으로 2008년 3월의 11억 932만 시간보다 4,626만 시간(4.2%) 줄었습니다. 이를 지난해 취업자 한 사람당 평균 취업시간(주당)으로 환산하면, 모두 97만 2천 명분에 이릅니다. 결국 가사, 육아 인구의 증가, “쉬었음”, 구직 단념자, 단시간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노동자들의 고용상황은 실업률 통계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열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경제위기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의 변화도 심각합니다. 노동부의 '2008년 4/4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임금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2008년 4/4분기 월평균 명목임금은 266만 1천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1%가 하락하였는데 상용노동자의 명목임금은 1.7%, 임시 일용 노동자의 임금은 9.4%가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임금 상승률은 6.4%가 하락하였는데, 상용노동자의 실질임금은 5.9%가 하락했고, 임시 일용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무려 12.9%가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에서의 임금감소율이 크고, 임시 일용 노동자에서는 특별히 30-99인 규모에서의 임금감소율은 무려 27.8%에 이릅니다. 이 집단에서의 임금은 66만 1천 원에 불과합니다. 산업별로 보면 더 열악한 곳도 있는데 운수업의 임시 일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36만 5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1.8%가 감소하였고, 기타공공서비스의 임시 일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52만 5천 원으로 무려 42.7%가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임금구성별 변화를 상용노동자의 명목임금을 통해서 살펴보면 정액급여는 5.1%가 상승하였는데 초과급여는 9.4%가 감소하였고, 특별급여는 22.4%나 감소하였습니다. 잔업 및 특근의 축소로 인한 임금감소가 심각하고, 상여금 및 성과급 축소로 인한 임금감소는 특히 심각합니다.

전체 노동자들의 2008년 4/4분기 주당 노동시간은 39.8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시간이 감소하였고, 비율로 보면 3.4%가 감소하였습니다. 상용노동자의 노동시간은 2.4%가 감소하였는데 소정실근로시간은 0.9% 감소, 초과시간은 15%의 감소를 보여 초과근로시간이 대폭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시일용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전체적으로 21.9시간으로 전년 동기 25.7시간에 비해 주당 3.8시간, 14.8%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들의 노동시간은 절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99인 규모에서의 노동시간은 18.6시간에 불과합니다. 산업별로 임시일용직 노동시간을 보면 운수업의 경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9시간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78.8%가 감소하였고, 기타 공공서비스의 경우 20.8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가 감소하였습니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0.6%가 증가하였는데도 12.0시간에 불과합니다.

고용관련 통계에서 당연히 취업자로 분류가 되는 임시일용 노동자는 노동시간의 감소로 인한 임금감소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 실업자까지 고려한다면 노동시간 감소 및 그로 인한 임금감소는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위기 초입단계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임금 감소는 현재 노동시간 감소를 통한 초과급여 감소와 상여금 및 특별급여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데, 이후 특별급여의 삭감은 더욱 심각할 것이고, 임금동결, 신입사원 임금 삭감 등 정부정책으로 보건데 정액급여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전체 임금감소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어떤 상태로 내몰리고 있나?

물론 경제위기라고 해서 여성노동자들만 힘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 노동자들 모두가 해고 위협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더욱 빈곤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례들을 봤을 때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도 자본주의가 태동한 이후 쪽 여성노동자들을 활용하고 착취하며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따로 있고, 집안일은 당연히 여성이 도맡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노동 상황들이 그것입니다. 흔히 여성들의 몫은 집안일이고, 가게를 유지하는 것은 남성들의 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일자리를 낮게 평가하는 근거가 되며 적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 고임금 노동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남성들의 임금만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경제위기 일수록 실직 상태의 남성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이 생계유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1930년대 대불황 시기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삶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조업 등의 일자리에 있던 많은 남성들이 실업 상태에 놓였지만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일자리는 유지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이미 성별 직종분리로 인해 여성들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청소, 비서, 식당일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의 불안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동시에 생계비용 절감을 위해 가사노동을 늘려야 했습니다. 즉

대불황 시기 여성노동자들은 고용 상태였지만 이것은 여성들의 권리로 제기 된 일자리가 아닌 이중부담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대불황 초기라 불리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IMF를 연상시키며 바로 해고의 위협부터 생각하게 합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마다 실직하고, 도산하고, 그래서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성노동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것은 “기혼여성 해고 1순위”라는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특히 여성들이 먼저 해고되고 정규직에서 밀려났었습니다. 결국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사무, 유통, 청소용역 등의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시직, 파견직, 계약직의 고용 형태가 일반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무기계약제, 분리직군제 등의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렇듯 여성과 취약계층 노동자들부터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려진 상황임에도, 이번 경제위기는 또 다시 가장 어려운 조건의 노동자들을 방패막이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삭감하거나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더 이상 갈 곳 없는 노동자들을 결국 벼랑 끝에서 밀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번의 경제위기 경험을 통해 어떤 대안과 투쟁을 만들어야 할까요?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대불황시기와 비슷한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성들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전체 노동자들에게도 좋지 않는 방식으로 이중부담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요합니다. 경제위기시에 왜, 특히 여성이 많은 고통을 감내해왔는지를 밝히며 여성들의 노동 조건을 열악하게 만든 철저한 성별분업과 가족강화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이에 여성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여성들만의 요구가 아닌,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해고와 고용불안의 칼날이 전체 노동자들에게 들이닥치고 있는 지금, 여성들만의 방어와 요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 여성들만의 몫이 여서도 안 됩니다. 자본이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을 분할시키며 단결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 맞서 전체 노동자들이 단결된 투쟁을 해야 합니다. 즉 여성과 남성,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 비정규직과 정규직 모두가 하나의 큰 투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경제위기에 맞선다는 것은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의 조건과 원인, 지켜져야 할 권리를 충분히 밝혀내는 가운데 전체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나?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의 도산과 폐업이 잇따르면서 직장을 잃고 공장 경영 악화와 일거리 축소로 인해 해고 '영순위'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이주노동자들의 실상입니다. 정부가 조장해놓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의식 때문에 노동자들은 경제위기로 인한 자신의 고용불안을 이주노동자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이러한 혼란을 틈타 위기의 원인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합니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는커녕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쫓아냄으로써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호도합니다. 그러나 세칭 '3D업종'에서 일해 왔던 이주노동자를 쫓아내면 그 자리에 내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어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은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그동안 기피해왔던 3D업종에서라도 일하라는 발상입니다. 마치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그동안 빼앗아왔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한 것일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간에 인종적 갈등을 부추기고, 끊임없이 이주노동자의 신분을 불안하게 만들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부정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이주노동자들을 국내로 들여온 것이지 결코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주들은 노동자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노동권을 부정하여 노예처럼 일을 시킬 수 있는 노동자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기업주들은 인종차별을 잘 활용하면 노동권 없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신분이 불안정해진 이주노동자를 활용해 노동권 없는 일자리를 확대할 수도 있고, 모든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동권 부정을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노동자가 외국인인가 여부가 아니라 노동권의 박탈 여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자본은 경제상황을 빌미로 이주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위기를 전기함과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더더욱 확실하게 부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경제위기 하에서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점에 대해 함께 싸우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내 노동여건이 하향 재편되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이주노동자 탓으로 돌리면서 경제위기에 따른 대중의 불만을 이주노동자에게 돌리려는 지배세력들의 시도에 과감히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지배세력들의 의도는 노동자들 사이의 단결에 흠집을 내고 노동자내 분열을 자극하여 경제위기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술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열심히 일한 것이 지금 경제위기의 원인이 아니듯 경제위기가 이주노동자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와 단결하여 당당하게 정권과 자본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만들어낸 위기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나와 다른 이주노동자가 아닌 함께 일하는 노동자로서 우리는 이주노동자들과 단결하고 연대하여 진정한 노동자의 힘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사회서비스란?

정부는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제고를 위해 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 보호 등), 보건의료(간병, 간호 등), 교육(방과후 활동, 특수 교육 등),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 분야 외에 공공재적 서비스(일반행정, 환경, 안전 등)가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부각되지 않았던 사회서비스가 경제위기를 거치며 만능열쇠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량해고를 몰고 왔던 경제위기의 기억으로 정부도 운동진영도 너나 할 것 없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자리 문제로 접근하기에는 많은 함정과 위험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사회서비스가 어떻게 제기되었고, 현재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경제위기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어떤 내용으로 제기해야 하는지 충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등장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사회서비스의 보편적인 보장보다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역시 사회서비스 확충을 일자리 창출의 계기로 삼으며 경제위기시 고용에 대한 불만을 잠정적으로 관리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사회서비스를 이야기하기 이전부터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민중들의 요구는 계속 있었습니다. 갈수록 생활이 어려워지며 남성과 여성 모두 일을 해야 했지만, 여성들이 일하고 남는 시간을 쪼개는 것만으로는 가족을 돌보고 부양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화 방식이나 일자리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결코 돌봄을 사회화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라고 소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는 여성들의 재생산의 권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여성노동자에게 그 일을 넘기는 방식일 뿐입니다. 여성들의 역할을 분리시키고 저평가해서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들어 놓은 지금의 사회는 다시 돌봄 노동을 여성에게 전가 하며搾값에 위기를 해결하려는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일부 여성운동 단체들이 여성을 위한 실업대책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라는 요구는 우려스럽습니다.

일자리 측면에서 사회서비스는 어떠할까요? 마찬가지로 대안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전체 노동자들의 해고를 방어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노동권을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라는 것은 임시방편이자 더욱 열악한 노동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IMF 경제위기 당시 정규직에서 잘린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불안정한 일자리로 몰려났던 것과 비슷합니다. 즉 전체 노동자의 해고를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요구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회서비스 일자리 상황은 말도 못하게 취약합니다. 1년도 안 되는 단기계약직에 파트타임 형태, 사회보험 적용 안 되는 사례가 절반, 시간급을 받는다 해도 시간급 자체가 낮고 이조차도 매달 들쭉날쭉합니다. 또한 시장화 전략 하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 간 경쟁이 심해지며 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은 더욱 하락할 것입니다. 이렇게 근로빈곤층을 대량 양산하는 일자리가 바로 정부가 말하는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정부의 이야기는 결국 노동자(특히 여성)들을 착취해서 싼 값에 위기를 관리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사회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가 여성의 권리이자 민중들의 보편적인 권리임을 이야기하며,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을 비판해야 합니다. 특히 각 돌봄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그들의 요구를 모으는 작업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노동권을 쟁취하는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럴 때만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GM대우 등 외국인 소유 기업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대량해고로 크게 이슈가 된 기업들은 쌍용자동차, GM대우, 만도 위니아, 한일파카유압 등으로 모두 외국인자본소유의 기업입니다. 쌍용자동차는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대주주이며, GM대우는 미국 GM이, 만도위니아는 CVC라는 초국적 사모펀드가, 그리고 한일파카유압은 미국의 파카하니핀이 대주주입니다. 현재 상하이자동차가 경영을 포기한 쌍용자동차는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GM대우는 정규직 전환배치, 비정규직 순환휴직으로 대량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도위니아는 아산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절반 가까운 220명을 정리해고 했으며, 한일파카유압은 전체 노동자 197명 중 113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소유의 기업들이 이렇게 빠르게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들 외국인 자본들은 대부분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한국에 진출한 자본들로 애초부터 기업을 성장시킬 목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헐값에 기업을 인수하여 인수 비용을 빠르게 회수하고 이익을 남겨 매각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제 위기가 시작되자 기업을 살리기 보다는 그나마 손 댄 여력이 있을 때 빠르게 기업을 정리하는 수준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GM대우는 2008년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자동차를 수출하여 영업이익을 2,900억 원이나 만들었지만, 정작 최종 이익 계

산(당기순이익)에서는 8,700억 원을 손해 봤습니다. 이유는 GM대우가 GM본사와 이상한 파생상품거래를 했기 때문인데, 뻔히 환율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을 매개하여 GM과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GM 본사에 1조 원 가량을 넘겨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GM대우가 이로 인해 큰 손실을 기록하자 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파카유압도 마찬가지로 부도덕한 작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일파카유압의 대주주인 파카하니핀은 한국에 한일파카유압과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한일파카유압을 고의로 고사시키고 있는데, 200여 명의 노동자를 모두 정리해고하고 한일파카유압의 자산을 모두 자회사로 이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후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으로만 노동자를 고용하여 경제위기가 더 심화되면 한국에서 보다 빠르게 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단물만 빨아먹고 철수할 수 있는 외국인자본의 비중은 주식시장에서 주가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자본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들 외국인자본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본 철수를 한다면 한국 경제는 바로 붕괴할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여러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위협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들 외국인 자본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자본 시장을 더욱 개방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입니다. 지금까지 이미 큰 이득을 챙긴 외국인자본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그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식시장 및 투자 회사에서의 자본 철수, 실질 소유 기업에서의 구조조정 등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엄격한 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법적인 제재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가 분담해야 하는가?

수많은 보수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이나 고통분담하자고 난리입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성과를 분담하자거나 동등한 주체로 대우하겠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으면서, 불황만 되면 ‘분담’하자고 해서 일단 패짚하기부터 합니다. 하지만 일단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 듯 하니 먼저 이게 ‘고통분담’인지 ‘책임전가’인지 따져보도록 합시다.

앞서 봤듯이 구제금융의 대부분은 금융투기로 인한 손실을 막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또 ‘일자리 나누기’ 역시 말 그대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임금삭감과 노동신축화(비정규직화)로 귀결되는, 즉 노동권의 후퇴를 감수하는 일자리 공유일 뿐입니다. 결국 이들이 내놓은 거시적인 정책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노동자들이 다 떠안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이는 ‘책임전가’입니다.

조금 더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통상 위기 때마다 구조조정을 앞두고 저들이 주장하는 대책이 있습니다. 임금이 너무 높아져서 경쟁력이 없고, 그래서 기업이 파산할 수 있는 위기가 온 것이니만큼 올해는 임금을 동결하거나 임금을 삭감하자고들 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임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나라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 이야기는 잠시 뒤로 제쳐둡시다.

그런데 이 주장은 마치 임금이 높은 기업이 임금이 낮은 기업보다 쉽게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사실과도 다릅니다. 이 말대로라면 미국의 기업들이 한국의 기업들보다 먼저 망할 것이라는 거고,

한국의 기업들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기업보다 먼저 망할 것이라는 건데, 사실 실제 진행양태는 거꾸로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우자동차가 현대자동차보다 먼저 망한 것은 대우자동차 노동자의 월급이 현대자동차 월급보다 높아서가 아닙니다.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이 다른 회사보다 조금 더 높다는 것 누구나 다 알지만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제일 먼저 망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작 망하는 곳은 손실을 쉽게 떠안을 수 있는 국가들, 기업들부터 먼저 망합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 손실은 필연적인데, 이윤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에서 지배세력들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것이죠. 결국 해당 기업의 손실을 각종 하청연계망이나 무역과 금융연계망을 통해 주변부 하층으로 떠넘기게 됩니다. 노동표준을 후퇴시키는 것이 쉽거나 금융을 통제할 역량이 없는 기업과 국가는 이를 하염없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더 떠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수정치인들이 임금 탓 하다가 “최저임금부터 손보려 하는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재벌기업이라도 살려야 하는데, 그럴려면 재벌기업의 손실을 다른 하청기업들에 떠넘겨야 하고 이러려면 ‘최저임금’ 기준이 낮아져야 하는 거죠. 말로는 중소기업체들의 애로를 고려해서라지만, 정작 속셈은 자신의 손실을 떠넘기는 데 있었던 것이죠. 고양이가 쥐 생각한대더니 꼴이 딱 그렇습니다.

현실에서 노동조건을 쉽게 후퇴시킬 수 있는 무책임한 기업과 나라부터 아이러니하게 먼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손실을 사회화하는 독특한 사회구조 때문입니다. ‘고통분담’하자는 말은 결단코 진심에서 우러나온 주장이 아닙니다. ‘책임전가’하려는 현실을 호도하려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경제위기 시기에 양보교섭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얼마 전 노동부는 3월까지의 임금협약을 진행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를 보고 우리들은 정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은 평균 1.1%인 반면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2.3%였습니다.

사실 금융위기가 올해 상반기 정도에 끝날 수 있는 일시적 현상이라면, 그리고 내년에 경기가 나아질 때 이를 충분히 보상해주겠다는 약속만 해준다면 눈 딱감고 양보교섭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위기는 지속될 것이고, 금융자본의 손실을 사회화하는 이 독특한 사회구조를 손보지 않는 이상 손실의 모든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떠 밀려들어올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들은 장기 경기 침체를 대비해 노동신축화 관련 법을 정돈하고, 최저임금 등 임금을 구조적으로 삭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도 정도가 있겠지’라고 믿고 싶겠지만, 이 역시 막연한 기대일 뿐입니다. 정도 없이 밀고 들어와 임금삭감, (정리)해고, 계약해지의 칼날을 휘두를 것입니다. IMF 당시 재벌기업들이 자신들의 문어발 식 경영확대로 인해 회사가 우후죽순으로 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통분담이야기하면서 희망퇴직과 임금삭감을 중용했지만, 그들이 중간에 구조조정을 멈춘 적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는 IMF 구조조정 당시 충분히 많은 희망퇴직을 받고도 단 한명이라도 정리해고자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무급순환휴직 등 노동조합이 양보할 수 있는 모든 양보안을 다 내놓아도 정리해고를 강행했습니다. 심지어는 노동조합에 향후 몇 년간 정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행복문

서까지 요구했습니다. 지금 쌍용자동차를 보십시오. 임금이 삭감하고, 1천억 원이 넘는 회사 발전 기금도 출연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채권단은 2646명을 정리하고 하겠답니다. 이들에게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란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배세력들은 1998년 IMF 당시와 비교했을 때 더 퇴행적일지언정 결코 못한 집단이 아닙니다. 기간제 사용 기간 2년에서 4년 연장 운운하더니 이제는 아예 비정규직 관련 법안 자체를 유예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복수 노조허용,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등 노동관계법 개정법률도 노조를 무력화 시킬 절호의 찬스라는 듯 시행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은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어놓고, 집회참가자 및 주관자에 대한 법적 제재방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언론통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건설, 조선, 자동차산업 등에서 퇴출기업을 가려내거나 가려낼 준비를 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자금마련에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IMF 당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이 정리해고를 위한 실질적 힘으로 변모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공적자금이 십중팔구 회사나 사용자 빛의 빛을 갚는 데는 쓰일 것이지 고용안정기금으로는 어렵도 없을 것입니다.

금융독점자본, 초민족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수정치인들이 이렇게 반민주적이며 반동적인 집단으로 탈바꿈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가들의 단호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들에게서 일말의 아량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양보교섭을 먼저 생각하게 된 데는 물론 경제위기와 ‘고통분담’이 데올로기에 따른 심리적 위축 탓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노동조합의 위세가 크게 떨어진 탓입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진 것입

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사고하고 극복방향을 찾아내서 투쟁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노동운동이 위기인 상황에서 어떻게 노동조합의 힘을 키울 수 있을까?

노동운동 위기가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원인부터 찾아내야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운동을 통해 임금하락을 저지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사실 이 또한 전투적인 투쟁 없이는 쟁취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쟁과정에는 언제나 늘 상대가 있는 법입니다.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단결에 화들짝 놀란 기업주들과 보수정치인들이 때로는 양보를 하긴 하지만, 경제적 양보는 이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투쟁의 성과를 미처 누릴 시간도 없이 곧바로 반격을 해서 저임금구조를 새롭게 창출하고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격화시켜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동강도를 강화합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당시를 회고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지배세력들은 노동조합 인정,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일정한 경제적 양보를 하였지만, 바로 보수대연합으로 기운을 되찾고는 온갖 공세를 펼쳐냈습니다. 2시간 노동시간 단축분에 대해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파업손실에 대한 무노동무임금을 주장한 것이나, 1991년 총액임금제를 제시하면서 임금체계개편을 시도하면서 임금을 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해내려 한 것이나,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1998년부터 하나씩 차례로 관철시켜 온 것이나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각종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대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까지 문제삼아가면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과 집행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각계각진하면서 지배세력들의

이 같은 공격이 노동자 내부의 분할선을 타고 들어왔다는 데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하청기업 노동자들 사이의 분할선을 타고 들어오기도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분할선,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의 분할선 등등을 타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회사 동료나 아니냐는 기업별 분할선으로까지 타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분할선에서 가장 핵심은 여성 억압입니다.

1990년 이념의 부재와 노동권에 대한 인식의 부재 속에서 연대의 대상과 폭이 좁혀지고, 임금과 고용을 방어하기 위한 투쟁은 개별사업장 수준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1987년 공장 담벼락을 넘나들던 지역연대의 힘을 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까지 정규직 대공장 임금인상률은 경제성장률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오르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고임금 고임금’ 하지만,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초장시간 고강도 노동이라는 온갖 수탈과정에도 노동조합을 통해 얻어낸 임금방어의 결과일 뿐입니다. 절대 고임금도 아니요, 대기업 노동자들이라고 착취를 안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500인 이하 사업장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하청계열화가 심화되면서 1990년대 임금상승의 지체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과 노동자에게 집중된 결과입니다.

이자, 배당의 형식으로 금융소득은 확대되고 유보이윤이 기업설비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노동자 내부 임금 격차란 부의 분배가 노동자하층에서 금융소득자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현상적으로는 마치 여성노동자의 임금을 남성노동자가,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 노동자가 빼앗아간 것처럼 보인거죠. 하지만 지배세력들이 이런 내부격차의 확대를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도덕적 공격을 강화하면서 노노갈등을 부추기면

서 이런 인식은 좀 더 공공연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이른바 정규직 대기업 노조가 이 같은 착취의 메커니즘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 없이, 그것도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여 각종 수당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임단협 투쟁을 진행해 왔던 것이죠. 이는 도리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한 임금 인상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 말 대기업 노조의 임금인상은 전체 산업의 임금인상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하청체계의 발달로 전체 산업의 임금인상이라는 부수 효과는 사라지고 도리어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맙니다. 임금격차의 원인제공은 아니지만, 자신의 임금방어에만 몰두함으로써 하청업체의 임금인상이 지체되고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외면한 것에는 책임과 비판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더구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일자리 지키기마저 사업장 수준에 그칩니다. 이른바 3제(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제)가 도입된 현실이 웅변하고 산별노조로의 전환조차 더딘 과정이 시사하 듯이 고용안정투쟁마저 철저히 대공장 기업별 단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임금방어투쟁에만 몰입하면 경제위기상황에서 노동조합 운동은 최종적으로 실패한다'는 마르크스의 경고가 새삼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민주노총 공격, 제3노총 건설 어떻게 봐야하나?

최근 민주노총에 대한 일부 노조 간부와 언론의 공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위원장,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모 경제신문을 통해 제 3노총을 건설하자고 주장하는가 하면, 인천지하철 노동조합과 인천공항공사노동조합이 민주노총 탈퇴 건을 총투표로 가결시키고, 뉴라이트 노동단체는 민주노

총을 비난하는 책을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민주노총이 합리적 노사관계보다는 강경 투쟁 일변도로 치달아 사회적 노사 평화를 해치는 것은 물론 사업장의 고용 안정에도 부정적이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조합원들과 시민들을 속이는 비열한 작태에 다름 아닙니다. 몇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현재 공항 내 아웃소싱 분야 10% 예산삭감을 둘러싸고 노사협의 과정에 있는데, 이로 인해 공항에 근무하는 6천 여 명의 비정규직이 심각한 임금삭감 및 고용불안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600여 명의 정규직만이 기입 대상인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우선 해고 저지 방침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차에, 정부 및 어용 노조들의 민주노총 비판 분위기에 편승하여 총연맹 탈퇴 총투표를 감행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정규직을 죽이고 민주노총에 상처를 입히는 대가로 정부와의 협상에서 떡고물을 얻어내려 한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민주노조 운동의 대의를 저버린 행위로 2004년 민주노총에서 제명당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2008년에는 백지 임금 교섭안을 사측에 제출하여,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백지 교섭안은 사실 정규직 임금 삭감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및 하청 기업에 대한 납품 단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현재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노조 간부들은 대부분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을 통해 자신들이 치부를 은폐하고자 하며, 비정규직을 죽여 자신들의 이해를 챙기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이들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자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반노동자적 노조들의 이러한 민주노총 때리기는 역설적으로 민주노총이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은 대공장과 중소기업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 노동자 전체의 이해를 위해 여러 정책들을 제안하고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고용과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크게 뭉쳐서 싸워야만 합니다. 이미 앞의 여러 글에서도 밝힌 것처럼, 정부와 기업가들은 노동자에게 1원도 양보할 의사가 없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손해를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무기는 단결과 투쟁 밖에 없음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식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운동의 전면적인 쇄신이 불가피합니다. 노동조합운동의 쇄신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운동에서 이념의 재건입니다. 노동자들 사이의 적합한 유대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념의 구성 없이 단결과 연대를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단히 추상적인 구호로 읽히거나, 지극히 실용적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87년부터 1990년까지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존재 양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노동해방’이라는 이념적 지향이 노동자들을 계급적으로 단결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른바 전노협 정신으로 표상되는 이 이념을 내세우면서 노동자들은 민중이 해방되어야 노동자가 해방될 수 있다는 계급적 의식을 가지고 투쟁하였습니다. 노동자의 해방은 임금노예제도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념적 지향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기업과 공장, 업종과 지역을 넘어 단결하고 전투적으로 싸웠으며, 소기의 정치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90년 이후 이념의 쇠퇴와 함께 노동조합운동이 실용화되고 오히려 기업별 노조 중심의 운동으로 후퇴한 현실을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노동조합운동에서 이념의 재건이 단순히 노동해방 이념을 복권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노동해방 이념의 구체적인 내용을 재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성해방이라는 이념과도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노동자운동의 무덤이라 할 수 있는 민족주의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제주의적인 지향도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이 회자되고 있는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은 이를 가리키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노동자운동이 대안세계화운동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의 재건을 한축으로 하면서, 경제위기 시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착취와 수탈의 메커니즘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과 비판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경제위기 시대 금융자본 및 초민족기업의 손실이 어떻게 사회화 되고, 노동자 민중에게 떠넘겨지는 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기화될 경제위기국면에서 노동신축화 및 노동재조직화를 통해 수탈을 다시금 강화하려는 지도 정확히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배세력들이 정규직-비정규직을 어떻게 이간질하는지에 대한 상황인식도 필요하고요.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의 행위자가 누구인지, 적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노동자들 사이의 이해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원칙적도덕적 호소만 가지고는 노동자들 사이의 단결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금융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 착취와 수탈의 메커니즘에 대한 노동자들의 과학적 인식만이 노동자들 사이의 단결의 기반을 닦을 수 있습니다.

이 위에서 노동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투쟁계획이 필요합니다. 손실을 하층노동자에게로 더 이상 사회화 할 수 없도록 노동표준을 엄격화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손실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며 임금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고용안정 쟁취 투쟁역시 눈에 보이는 회사 동료 조합원만의 해고를 저지하는 투쟁이 아니라 제도적 요구를 통한 전 민중의 고용안정 투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자 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나?

실업은 자영업자, 건설일용직에서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여 중소기업체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생산물량마저 감소해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손실이 벌써부터 노동자 민중에게로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해고와 임금삭감이 이대로 관철되면 노동신축화를 위한 제도정비 역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용역하청시스템에 따라 손실이 용역 하청노동자에게로 집중되는 메커니즘이 확립되어 있는 상황, 노동자 내부의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고용보장투쟁과 임금삭감저지투쟁은 개별기업 노동조합의 틀 내에 갇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경제위기를 틈타 노골적으로 노동권을 부정하면서 해고를 최우선적인 위기극복책으로 활용하고, 노동권 없는 일자리 창출로 고용불안 확대에 따른 대중의 불만을 기만하려 하는 지배세력들과의 투쟁을 확대해야 합니다. 단위사업장 수준의 요구를 넘어 노동자의 계급적인 요구로서, 완화된 정리해고제 앞에서 긴장하고 있을 정규직 노동자와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 시기 공동의 요구로서 자행되고 있는 해고의 중단을 핵심 목표로 내걸고, 이를 제도화 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합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무작위로 확산되는 해고위험 앞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제위기 동안에 적용되는 ‘한시적 해고중단 및 고용안정 특별법’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한시적 해고중단 및 고용안정 특별법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해고요건 엄격화(정리해고 조항 적용 한시적 유예). 둘째, 계약해지조건 엄격화(경제

위기시기 계약해지 중단,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계약 해지 조건 및 사용자 책임성 강화, 하청 용역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셋째, 파산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승계(파산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정부지원을 통한 고용 보장, 정부의 파산 기업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준하는 고용 승계 의무). 넷째, 정부지출 증대를 통한 고용 확대 (일자리 창출 및 노동권 보장). 다섯째,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확대(고용보험 지급기준 확대, 실업부조 지원 확대).

한편 2001년부터 전개된 최저임금인상투쟁은 재벌기업들의 손실을 어느 이상으로 노동자에게 떠넘길 수 없는 노동표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조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 임금인상 효과로 드러납니다. 또한 경제위기상황에서 다소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물량감소에 따른 각종 수당, 성과급이 삭감된 상황에서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실질수령액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수령액 사이의 격차가 줄어든 것입니다. 따라서 물량감소에 따른 소득감소를 회복하려는 입단협투쟁과 최저임금 인상투쟁은 임금 삭감 저지(혹은 임금소득 보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2009년 최저임금투쟁은 과거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재벌 기업주들이 경제위기에 따른 자신의 손실을 원하청 구조를 활용하여 하청 용역노동자에 떠넘기려는 시도가 법정 최저임금액만큼 제한되게 됩니다. 둘째, 물 밀 듯 밀고 들어오는 임금삭감시도가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일정한 선에서나마 저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이 그 자체로 물량감소 및 각종 임금삭감으로 인해 유실된 임금을 회복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은 노동자들이 함께 공동의 목표로 삼는 임금삭감 저지투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투쟁을 통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의 단결을 도모해야 합니

다. 해고위협과 임금삭감에 맞서는 투쟁을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의 초석으로 삼아 노동조합운동의 이념을 재건하고, 노동조합운동의 전면적인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안사회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Ⅱ. 자본주의의 위기,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 경제위기는 어떻게 진행될까?

미국 경제위기는 신용경색을 넘어 은행위기가 전개되면서 민간기업의 파산위험이 대형 상업은행과 보험사, GM, GE 등의 거대 제조업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은 2008년 전분기 대비 연 환산 -6.3%를 기록했고 1982년 이래 분기 성장률로는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기침체로 4분기 수출(실질기준)은 -10.2% 감소했고 소비지출(실질기준)은 1980년 이래 최대인 -4.3% 감소했습니다. IMF 수석정책자문위원을 지낸 아이켄그린과 오러크 교수는 현재 세계경제위기가 산업생산 측면이든, 수출이나 자산가격 측면이든 간에 대공황 때의 경로를 밟고 있거나 그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자료에 따르면 1929년 6월과 2008년 4월의 전세계 산업생산을 100으로 잡았을 때 초기 12개월 간의 궤적은 두 그래프의 낙폭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두 시기 전세계 무역량 비교를 보면 세계무역이 대공황 시기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무역의 파괴가 대공황을 악화시키는 요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충격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전세계 주식시장 측면에서도 이번 세계경제 위기의 낙폭이 대공황 때보다 훨씬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3월 18일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금리운용목표를 0~0.25% 수준으로 유지하고 정부보증기업의 채권 매입 규모를 1,0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보증기업이 발행한 증권 매입규모를 기속 발표액인 7,500억 달러만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기침체와 자산가격 하락으로 금융

기관의 손실규모가 계속 확대되면서 유동성부족(신용공급위기)에서 근본적인 변제불능(은행위기)으로 전환되자 미국 정부는 연준을 통해 수조 달러의 긴급유동성을 투입하고 금융기관 부실을 완화하기 위해 수조 달러의 구제금융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준금리 결정이나 공개시장조작 등 통상적인 중앙은행의 활동을 넘어서는 것으로 연준은 사상 유례없는 신규 대출제도를 도입하고 유동성 공급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월 24일 오바마 정부는 새로운 금융안정종합대책의 세부내용을 발표하면서 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투입은 1차 공적자금 투입과는 달리 엄격한 경영건전성 실사(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건전한 은행과 부도은행을 분류하고 공공 민간투자 프로그램(PPP)을 통해 건전한 은행은 구제금융을 투입하고 부실한 은행은 국유화를 하게 됩니다.

정부의 추가적인 자본투입 방식은 기존과 같은 무의결권 우선주 매입과 달리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를 매입하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보통주로 전환하여 유형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씨티그룹이 그러한 예인데 오바마 정부는 2월 27일 씨티그룹에 대해 이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를 최대 36%까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부분 국유화로 볼 수 있는데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경영권을 부분적으로 행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사진이 교체되면서 소유지배구조가 변화하게 되고 구조조정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 국유화는 은행건전성 회복을 도모하여 재사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국유화 대신 사전사유화(pre-privatization)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한편 러시아와 동유럽 지역의 경제위기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발전이 미흡한 동유럽 지역 국가들은 서유럽 등 선진국 금융기관을 통해 대규모 외화대출을 이용하여 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풍부할 때 외부에서 자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성장전략을 구사해왔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해외자금 유입이 중단되고 자금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유럽의 경우 금융부문에서는 동유럽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고 경제규모가 작은 오스트리아, 스웨덴, 벨기에 등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부문에서는 동유럽에 대한 수출규모와 비중이 큰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오스트리아 등이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동유럽발 사태가 일어날 경우 한국도 큰 충격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유럽계 은행들이 한국 외채의 62%(1,510억 달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동유럽발 금융위기로 이들 은행이 손실을 입으면 한국에서도 자금을 회수하거나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이윤율 하락 국면에서 그것을 역전시키는 기술, 조직, 정책 및 제도의 혁신을 동반한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의 등장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헤게모니를 대체하는 새로운 헤게모니가 등장하지 않는 조건에서 세계 대불황의 전개는 자본주의의 파국적 위기 국면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G·20은 세계경제의 회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2009년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2차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상회의 개최 직전인 3월 31일 발표된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1.7%로 예상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이자 예상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진 것입니다.

2차 정상회의에서는 2008년 11월에 열린 1차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5개의 공동원칙에 따라 몇 가지 분야에서 가시적인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먼저, 금융 규제 및 감독체제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IMF 재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흥국과 빈곤국 지원을 위해 1조 1,000억 달러를 공급하기로 했고, 그 중 7,500억 달러를 IMF에 공급해 위기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셋째,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IMF에 대한 개도국의 지분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반면 중국이 강력하게 요구한 기축통화 논의는 주요 이슈에서 제외되었고, 무역장벽을 새롭게 도입하는 보호주의 확산 방지 방안은 선언적인 수준에서 합의문에 반영되었습니다.

두 차례에 거친 G20 정상회의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가와 전망은 다자주의와 금융권력의 약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패권을 둘러싼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대결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G20이 향후 세계패권이 미국, 유럽, 아시아(중국)의 삼극체제

로 변화하는 과도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 강화로 영미계 금융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은행, 헤지펀드,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영미 금융산업에 비해 중국과 일본 등의 금융업계가 약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요구한 경기부양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유럽이 수용하지 않았고, 금융규제가 미국 금융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G20의 정치적인 성과는 미국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향후 상당기간 동안 세계질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G20이라는 틀을 미국이 용이하게 활용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세계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제안한 G8을 G20으로 확대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G8에서 과대 대표되는 유럽의 입김을 제한하고 신흥국을 포함시켜 국제적인 통치성을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프랑스가 요구했던 IMF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기구 설립이나 중국의 새로운 기축통화 논의를 G20 의제에서 제외한 것은 미국의 의도가 관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IMF의 개혁도 원칙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되었으나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IMF의 재원확대로 미국의 입김이 강한 IMF의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역이었던 IMF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것은 G20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G20에 대해서 “새로운 브레튼우즈인가, 새로운 워싱턴컨센서스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G20이 미국의 패권과 금융세계화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보완하고 수선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G20 결과를 세계 사회운동의 인식과 비교해보면 그 한계가 훨씬 뚜렷해집니다. 현재의 위기가 금융세계화 일부의 위기가 아니라 금융세계화 자체의 위기, 나아가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금융제도와 국제기구를 부분적으로 뺄지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변화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현재 지배적인 권력의 대표자인 20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합의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미국의 세계적인 헤게모니가 쇠퇴하고 하락한 이윤율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케인즈의 의도대로 금융억압이 가능했던 것은 강력한 헤게모니 국가의 부상과 자본주의의 상승기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례없는 위기로 자본가와 패권국가 정상들이 합의한 부분적인 금융규제 도입에 과도한 기대를 걸 수 없습니다.

세계 사회운동은 금융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와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민주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대안을 현실화시킬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의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싸울 것인지에 착목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노동자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요구 투쟁과 금융위기의 본질을 공격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 투쟁의 결합일 것입니다. 나아가 운동의 매개를 통해 자본주의의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경제는 경상수지 흑자로 선전하고 있나?

최근 경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환율 및 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경제위기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시점이 아닌가하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자동차, 반도체, 핸드폰 등 한국의 주력수출 산업이 몰락하고 있는 타국에 비해 선전하면서 한국경제가 상대적으로 건실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낙관적 전망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요?

먼저 경상수지 흑자 전환을 한국경제의 선전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급격한 수출 감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2002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했던 수출이 2008년 4/4분기에 감소세로 전환되고 2009년 들어서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4분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4.5% 감소했습니다. 최근에는 수출부진이 전 지역과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등 개도국으로의 수출도 모두 감소세입니다. 10대 수출품목 중 자동차, 자동차부품, 컴퓨터, 반도체, 석유제품 등은 2009년 1~2월 30% 이상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52.9%에 달하고, 수출의 2000~2008년 경제성장 기여도가 4.9%p로 같은 기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4.4%를 상회합니다. 따라서 수출의 급감은 한국경제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1,500원대를 오르내리던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엔화 강세가 한풀 꺾이면서 그나마 가격경쟁력을 통해 유지되던 수출규모

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수출감소는 1998년 IMF 위기나 2001년 IT거품 붕괴 당시보다 훨씬 충격이 큼니다. 1998년과 2001년에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각각 2.5%, 2.2%였던 반면 2009년에는 -1.0% 정도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998년과 2001년에 각각 -2.8%, -12.7%를 기록했던 한국의 수출감소 폭도 2009년에는 훨씬 커져 -20%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이 급감했음에도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것은 수입이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의 소비축소가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역수지 흑자에는 10대 수출품목 중 유일하게 작년보다 수출이 증가한 선박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박은 1~2월에 작년에 비해서 34.5%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박 수출 호조는 착시현상에 불과합니다. 선박은 수주 후 인도될 때까지 2~3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인도될 때 수출액으로 잡힙니다. 반면 2009년 들어서 한국의 4대 조선업체는 한 척을 수주했을 뿐입니다.

조선업체들은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계약과 동시에 수주액의 대부분을 선물환으로 팔아버립니다. 이를 받아준 은행은 해외에서 외화를 단기 차입하고, 나중에 조선업체들이 인도시 들어오는 달러를 은행에 갚으면 이를 다시 해외에 지불합니다. 따라서 선박수출이 호조를 보여 장부상에는 외화가 유입되는 것으로 기록되어도 실제로는 외화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2009년 3월 무역흑자가 46억 달러였는데, 선박수출 41억 달러를 빼면 5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국내 고용사정도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실업률은 4.0%로 2008년 3월에 비해 0.6% 증가했습니다. 실업률 증가폭은 크지 않으나 취업

자 수가 전년동월에 비해 19만 5,000명 줄어들었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52만 5,000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8.8%를 기록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실업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계근로자, 불완전취업자, 취업준비인구 등 유사실업상태에 빠진 인구를 모두 포함한 청년실업률은 18%대에 달합니다. 실업률 변동이 경제여건 변화에 늦게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출감소, 국내시장 축소, 고용사정 악화로 인한 한국경제의 위기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의존도가 높고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상대적 선전이나 독자적인 회생을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어떠한가?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국내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자본은 690억 달러에 이릅니다. IMF 위기 당시인 1997년 9-12월 사이의 유출액 181억 달러와 비교하면 규모가 약 4배에 달합니다. 외국자본 이탈의 내역을 살펴보면 IMF 위기 당시에는 차입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자금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2007년 말 전체 외국인투자 중 주식투자의 비중이 39.0%로 OECD 30개국 중 3위에 달합니다. IMF 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됨에 따라 언제든지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유가증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자본의 이동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는 2005년 이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상반기까지 나타난 주식투자 자금 유출의 주된 동기가 투자 차익 회수 차원이었던 것에 반해,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한 2007년 하반기부터는 현금 확보와 안전자산 비중 확대에서 비롯된 측면이 큼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금이탈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영향력은 여전히 큰 편입니다. 2009년 2월말 시가총액 기준으로 외국인 비중이 28.5%에 달하고 있어 외국자본의 대규모 추가 이탈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주가하락이 불가피합니다.

해외 차입자금 중 단기 차입금의 비중이 큰 것도 큰 문제입니다. 현재 전

채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의 비중이 40%에 달해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될 경우 급격히 이탈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매우 큽니다. 대외채무 중 유동외채(단기외채+장기외채 중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의 비율은 51%에 달합니다. 또한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 비율이 2007년 말 77.8%에서 2008년 말 96.4%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대외투자 잔액과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 잔액, 한국의 대외채권과 대외채무를 보여주는 아래의 표를 보면 사태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작년 하반기에 급격히 빠져나가 1년 동안 외국인 투자 잔액이 2,250.1억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환율이 폭등한 것입니다. 대외채권과 대외채무를 비교한 순대외채권도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서 2008년에만 697.4억 달러가 줄어 작년 말 -323.4억 달러로 한국이 순채무국이 되었습니다.

[표] 순국제투자자과 순대외채 (단위: 억 달러, %)

	2004	2005	2006	2007	2008
A. 대외투자	3,250.2	3,599.7	4,513.2	5,967.9	4,914.8
a. 대외채권	2,842.0	3,086.0	3,666.6	4,205.6	3,481.6
B. 외국인투자	4,134.9	5,394.4	6,522.6	8,263.3	6,013.2
b. 대외채무	1,722.6	1,878.8	2,600.6	3,831.5	3,804.9
순국제투자자(A-B)	-884.8	-1,794.8	-2,009.5	-2,295.4	-1,098.4
순대외채권(a-b)	1,119.4	1,207.2	1,066.0	374.1	-323.4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외환보유액의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당시 89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던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 이후 맞게 된 우호적인 세계경제 여건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2000년 5월 855억 달러로 급격히 늘어났고, 2008년 3월 2,638억 달러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2008년 말 외환보유액은 2,012억 달러로 감소했고, 현재까지 2,000억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해외언론과 경제연구소는 한국투자공사의 손실, 미국 회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 투자 손실 등으로 가용외환보유액이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반대로 2001년 말 외환보유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과도한 외환보유가 기회비용을 발생시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과도한 자금을 쌓아두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고, 또 환율안정을 위해 외평채를 발행해 외환을 매입하면 이에 따른 이자지급도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IMF 위기 당시에는 외환보유액의 과소가 문제가 되었다가, 2000년대 초에는 과다여부가 논란이 되었고,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다시 외환보유액 부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한국경제가 그만큼 대외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서 한국과 같은 신흥시장의 화폐가치는 하락(환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국가 간 생산력의 격차에 따라 무역을 통해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잉여가치의 이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융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신흥시장의 주식시장 등에 초민족 금융자본이 투자하면서 생산력 격차에 따라 발생하는 화폐가치의 하락이 일시적으로 저지될 수 있습니다. 2004-05년의 한국경제가 그러한 예입니다. 하지만 금융거품이 폭발하는 시기에 지연되었던 화폐가치의 하락이 폭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단기간에 환율이 폭등하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이 바로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에 발생한 것입니다. 즉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진전에 따라 신흥시장의 환율불안은 상존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외환위기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위기가 격화되는 경우 유동외채와 주식 및 채권 시장의 외국인투자가 대거 이탈한다면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외환위기에 극히 취약한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금융시장이 거의 완전히 개방되고 자유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가 국제적인 금융투기의 장이 되면서 외국자본의 유출입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이를 통제할 방법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IMF 위기 당시에는 미국, 중국의 경제 활황과 국내 IT 산업의 급성장이라는 우호적인 환경이 존재했지만, 현재는 세계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재발할 경우 그 영향은 훨씬 장기적일 것입니다.

금산분리완화 같은 금융정책의 문제는 무엇인가?

한국 경제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금융시장 발전을 기치로 내건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을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되어 2007년 국회를 통과한 자통법이 세무 감독규정 정비와 시행령 마련으로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된 것입니다. 자통법은 첫째, 기존에 겸업이 제한되었던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영사, 신탁회사가 금융투자회사라는 이름으로 겸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전에는 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금융투자상품만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었다면 자통법은 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의 개발에 대해서 사전적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금융상품개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존의 기관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바꾸어 은행이나 증권사에 대해 기관형태의 차이에 관계없이 자통법이라는 단일 법률에 의해 규제를 하게 됩니다.

자통법으로 금융기관별 장벽이 해체되어 금융투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와 소액결제와 관련된 은행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통법으로 금산분리 완화효과도 발생하는데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 그룹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지만 각각 삼성증권, HMC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당 증권사가 삼성은행, 현대자동차은행, 현대중공업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한미 FTA에서 미국에는 있으나 한국에는 없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허용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 성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국내에 지사나 자회사를 두면 한국 회사로 인정받기 때문에 자통법이 시행되면 똑같이 포괄주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즉 한미 FTA 협상결과와 무관하게 초민족 금융자본의 신금융서비스가 무차별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개발이 자유로워지고, 금융투자회사 간 장벽이 해체되면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자통법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차이니즈 월)를 설치하기는 했으나 포괄주의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눈속임할 수 있는 신규상품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거래 기법을 사용한다면 이해상충을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금융거품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통법을 입안 추진하고 통과시킨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동북아 금융허브론’을 계획하고 같은 해 12월 재정경제부 산하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금융허브 전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데 이미 2009년 1월 자통법 개정안 등 10개 금융법안이 통과되었고 현재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중요한 금융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산업자본에게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터줘 금산분리의 마지막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재벌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쉽게 만든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주회사가 보험회사와 비금융회사를 직접 지배하는 것이 허용되고 금융투자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투자회사가 산업자본까지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한국 재벌이 금융적 수단을 통해 경제지배력을 확장하도록 만들며 나아

가 전체 경제의 금융화를 심화시키면서 금융위기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전세계적으로 금융세계화가 진전되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채권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고 1986년 영국은 외국인에 대해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를 모두 허용하는 ‘금융빅뱅’을 단행함으로써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다른 중심부 국가들도 잇달아 주식시장을 개방했습니다. 증권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금융기관 중에서 전통적으로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은행의 비중이 감소하고 연기금과 투자신탁기금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이 금융시장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은행은 인수합병(M&A)과 금융혁신을 주도하면서 증권시장 중심의 금융세계화를 선도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에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로 증권시장 중심의 금융세계화가 현재 급격히 붕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미국의 5대 투자은행이 파산하거나 독자 생존을 포기했습니다. 금융거품의 붕괴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자본시장과 투자은행의 육성이라는 목표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지배세력은 현재의 위기가 보여주는 역사적 경고에 아랑곳 하지 않고 금융투자기관 활성화와 대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실물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금융부문으로 쏠리고 금융적 축적마저 붕괴한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시장 육성으로 한국경제가 회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금융시장 육성은 실물경제와 거의 관련이 없는 휘발성 높은 가공자본의 거품을 확대해서 금융위기의 위험을 도리어 높일 것입니다. 증권을 다시 증권화하고 증권화 사슬을 연장하고 통

제되지 않는 파생상품을 확산시킨 결과 형성된 금융 거품이 이번 경제위기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자본시장 육성을 통해 금융세계화에 편승하려는 것은 미국의 파국적 결과가 말해주듯이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하기만 할 것입니다.

각종 경기부양책으로 경제위기가 극복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는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색 뉴딜의 핵심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50조 원을 투자하여 9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녹색 사회간접자본 투자 분야에 4대 강 정비, 녹색 교통망 구축,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둘째, 저탄소 고효율 산업기술 분야, 셋째, 친환경 녹색생활분야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녹색 뉴딜의 문제점은 기존에 발표되었던 여러 가지 정책이 중복적으로 짜집기 되어 있어 새로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비판으로 잠정 중지된 사업이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업이 녹색 뉴딜로 포장되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체 계획이 마련되기도 전에 시급히 기공식을 강행한 4대 강 정비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다른 이름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또 녹색 뉴딜에는 물의 상품화로 비판 받던 물산업 육성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경제위기를 해결하기보다 토목사업으로 부동산 거품을 연장하고 저렴하게 제공되던 공공재와 사회 서비스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변형하면서 공공재의 가격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또 정부는 녹색 뉴딜을 통해 96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나 이는 총 일자리 규모를 연인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실상은 기금이 투입되는 4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매년 24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일자리

96만 개 중 95% 이상이 건설직이나 단순생산직으로 저임금 비정규직입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3월 24일 28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올해 예상 국내총생산(955조원)의 3%에 이르는 것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 보전에 11조2천억 원을 쓰고 일자리 창출 등에 17조7천억 원을 쓰겠다고 합니다. 추경이 이처럼 대규모로 편성된 것은 정부가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경기를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세금 감면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 생활지원(4조2천억 원) △고용유지 및 취업확대(3조5천억 원) △중소 수출기업과 자영업자 지원(4조5천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3조) △미래대비 투자(2조5천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부는 한시적인 사업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실제로 소득 보전은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소득을 지원해주는 데 초점을 맞췄고, 일자리 55만 개(연간 기준 28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한 일자리 사업도 대부분이 6개월 안팎의 한시적인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금산분리완화를 시행하는 등 금융 불안정성을 재고하지는 않은 채 최하층의 서민들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광범위한 빈곤,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더러 정부의 기업친화적 정책의 정당화를 위한 생색내기일 따름입니다.

심지어 정부는 28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슈퍼추경 등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에 노력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재정지출 조기집행의 성과가 경기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향후 2년간 각종 규제집행을 중단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완화 제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과 최저임금 제도 2년 유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간급 4,000원, 주당 44시간 적용

시 월 90만 4,000원인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하기를 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는 최저임금 제한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기 때문에 규제유예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은 2006년 4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OECD 평균치인 13%보다 3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은 노인인구의 빈곤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더라도 일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고용조건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뜻인데 고용조건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최저임금이 감액된다고 해서 고용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며 단지 노동자들끼리 서로 더 낮은 임금을 향해 경쟁하게 만들면서 고용조건을 황폐화하게만 할 것입니다.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문제는 무엇인가?

경제 위기로 일자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경련, 경총 등의 기업가 단체들은 연일 임금삭감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기업가들이 주장하는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현재의 해고 위협을 감소시키고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정부와 기업가들의 주장은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기업가들이 지불하는 임금은 이미 기업 생산 활동에 매우 작은 부분입니다.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기업들은 필사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관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외주 하청 생산 증가와 비정규직 고용 증가로 인한 저임금 고용불안 문제는 이미 한국 사회의 단골 이슈가 된지 오래입니다. 제조업을 예로 들면, 2007년 제조업 영업총비용(총제조비용+판매/관리비)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합니다. 즉, 기업 성장에 필요한 89%는 인건비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임금의 50%를 삭감해도 사실 전체 기업 경영에 미치는 효과는 5%에 불과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기업가들이 본 손해를 스스로 책임지기보다는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GM대우는 2008년에 파생금융 상품 투자로만 1조 원가량을 손해 보았는데, 이 손해를 회사 돈을 가지고 놀음을 한 임직원들이 아니라,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 자동차를 생산한 노동자들

에게 떠넘기며 비정규직 해고, 정규직 임금 삭감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위기라는 상황을 이용하여 노동자 임금 수준을 더욱 낮추어 장기간 더 큰 이득을 얻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7년 IMF 위기 시기에도 고통분담을 주장하였지만, 결국 기업가들은 이후 수출 증가 등으로 매우 큰 이득을 얻고, 노동자들은 더욱 큰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내몰린 경험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노동비용을 더욱 줄여 기업가의 손해를 만회하려는 술책일 뿐입니다. 기업가가 원하는 것은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손해를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명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친기업 정책을 선포한 정부 역시 기업가들에게는 혜택을, 노동자에게는 고통분담을 외치며 기업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부동산 감세로 약 80조원, 각종 부동산 지원 기금으로 약 20조원, 사실상 건설 기업들 퍼주기 사업인 녹색뉴딜로 60조원이 넘는 재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노동자 일자리 지원은 공공기관에 최저임금만 보장하는 인턴채용 정책, 고용유지지원금 3천 억 확대, 긴급 공공근로사업 2조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지원도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비정규직 확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두 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는 비정규직 관련 조항을 4년으로 개정하고, 파견 근로 업종을 대폭 확대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두 배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노동자 중 50%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조건과 임금이 다시 크게 후퇴할 것입니다.

진보진영의 일자리 대책: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와 해고금지특별법 제정운동

민주노총, 진보정당, 사회진보연대 등의 사회단체들은 정부와 기업가들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며 대안적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이 중 주목할 것들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해고금지특별법(또는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운동 등이 있습니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현재 OECD 평균보다 연 548시간이나 더 일하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을 고대제 개선을 통해 해결하면 현재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본과 기업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면 타당하다고 인정하지만, 동시에 임금삭감과 단시간 근로 등의 노동 유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보진영의 노동시간단축 요구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04년 법정노동시간단축(주 40시간) 이후에 고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기업들이 단축된 노동시간만큼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외주 하청을 늘리며, 오히려 노동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노동 강도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노동시간단축이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기업의 저임금 외주 하청생산, 비정규직 고용, 노동강도 강화 등에 대한 대책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와 기업가들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시간단축을 결과적으로 일자리 증가 없는 임금감축과 노동유연화로만 이어갈 공간이 큼니다.

최근 사회진보연대를 비롯한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해고금지특별법' 제정 운동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고금지특별법은 첫째, 파산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노동조건 하락 없는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고 둘째, 외국인 소유 기업의 노동자 고용에 관한 특별 책임을 제도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노동자 해고 시 외국인자산을 통제하고, 해외본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자본 유출을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들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존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외주 하청 노동자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계약 해지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부실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한가?

IMF 위기 당시 국내 대기업들이 연쇄 도산한 것과 비교해서 최근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기업 도산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특정 기업집단들의 부실이 문제였다면 현재는 다수 중소기업의 부실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 건설 조선사의 경우에는 이미 부실이 발생해서 2009년 1월과 3월에 1-2차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해 7개사가 퇴출되고 29개사가 경영정상화계획에 들어갔습니다. 4월부터는 대기업계열사에 대해서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앞으로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과 구조조정 요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자본확충펀드(20조 원), 구조조정기금(40조 원), 금융안정기금(금액 미확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은행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 10조 원, 산업은행 2조 원, 민간자금 8조 원을 유치해서 조성하고 이를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우선주 등을 매입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조조정기금은 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설치하여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을 매입 정리하는 것이고, 금융안정기금은 한국정책금융공사 산하에 설치하여 은행을 포함하여 기타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연쇄적인 부도를 막기 위해서 공적자금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투입된 공적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공적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누가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측면에

서 현재 이명박 정부가 조성하고 있는 공적자금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째,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은행을 위시한 금융기관에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기관은 한국경제의 금융화를 주도하고 막대한 이윤을 해외로 빼돌려 현재와 같은 위기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대표적으로 IMF 경제위기 이후 외국자본에 장악된 국내은행은 배당금으로 엄청난 자금을 해외로 유출했습니다. 2007년 유가증권 외국인 배당총액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국민은행, 외환은행, 신한지주회사가 포함되었으며, 특히 2위를 기록한 국민은행은 한 해에만 6,700억 원을 외국인에게 배당했습니다.

또 2000년 이후 은행들은 몸집을 불리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자가 싼 외화를 단기차입하고, 고금리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은행은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의 주식거품과 부동산거품 조성에 큰 몫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번 은행에게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통제와 제한 없이 자금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적자금 관리 감독의 주체가 불명확합니다. 정부는 민관이 함께 출자하는 은행자본확충펀드의 경우에는 공적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역시 부실이 현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과거의 공적자금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즉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른 의회의 감독과 통제를 받지 않고 정부가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는 금융위원회가 60조 원 이상 되는 공적자금의 통제권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권한을 일임하여 새롭게 만든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 전반을 입안·관리·감독하는 막대한 힘을 가지

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2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 경제 관료와 자본가들로 구성된 금융위원회가 아무런 제한 없이 기금의 사용을 결정한다면 공적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지 뻔합니다.

셋째, 공적자금의 비용은 국민들에게 물리고, 그 공적자금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IMF 경제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이 1685조 원이고 이중 현재까지 55.5%인 93.6조 원만 회수되었습니다. 엄청난 미회수금액과 이자비용은 2027년까지 일반회계(세금으로 국민의 부담)와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특별보험료 형태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 과정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의 대량해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제위기와 기업부실을 발생시킨 대주주와 경영자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에게 고통과 비용을 떠넘긴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공적자금을 노동자 해고와 노동 유연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미 투기자본에 의해서 부실로 내몰려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의 경우 전체노동자의 37%에 이르는 2,600여 명을 해고하는 자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자의 고용을 희생해서 기업의 가치를 유지하려는 자본과 국가의 구조조정 의도가 표면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에서 나오는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자본의 이윤추구 때문에 발생한 경제위기의 비용을 민중의 혈세를 통해서 메우겠다고, 당연히 이는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합

니다. 투입되는 공적자금은 무엇보다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을 유지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돈을 사용해서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범죄행위가 반복될 것입니다. 또한 공적자금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공적자금이 자본가와 경영자의 과실을 덮고 그들의 이윤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면 금융기관은 자신의 부실을 사회화하고 정책매개자 역할로 한국사회의 금융적 재편을 다시 꾀할 수 있어 이종의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반면에 국민들은 세금을 통해서 비용을 떠맡고 노동자들은 해고와 임금삭감으로 이종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이명박 정부 경제위기 대책의 계급적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의 기관지

사회운동 을 구입할 수 있는 곳

교보문고(종로)	02-397-3465
영풍문고(종로)	02-399-5631
그날이오면(관악구, 서울대 앞)	02-885-8290
풀무질(종로구, 성균관대 앞)	02-745-8891
알라딘(인터넷)	www.aladdin.co.kr

홈페이지 www.movements.or.kr 에서 정기구독을 신청하거나 날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관지에 실린 모든 글은 웹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안내

『사회운동』은 <사회진보연대>가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1년에 6번 발행되며,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www.movements.or.kr)에서 구독신청을 하시거나 약정된 금액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고 연락주십시오.

정기구독료 | 1년 35,000원 (1년 6회)

입금계좌번호

하나은행 350-910028-38107 (박하순)

외환은행 611-016291-632 (박하순)

국민은행 822402-04-079714 (박하순)

홈페이지 | www.movements.or.kr

이메일 | edit@jinbo.net

전화 | 02-778-4001~2

팩스 | 02-778-4006

사회진보연대 후원계좌

하나은행 350-810261-33907 (박하순)